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3호 소개

□ 최신 세계헌법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국헌법 수정 제6조상의 배심재판을 받을 형사피고인의 권리가 만장일치 평결을 요구하는지 여부> 사건은 미국 대부분의 주와 달리 배심원 평결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유죄평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루이지애나 주법이 공정한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루이지애나 주가 비(非)만장일치 평결을 허용하게 된 배경이 인종차별적 이유와 평결에 이르지 못하는 배심원의 비율을 줄이고자 하는 비용-편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기존 선례(Apodaca 판결)를 뒤집고 헌법 수정 제6조는 피고인에게 중범죄의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의 배심원 평결을 요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직장 내 감시 카메라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사건은 스페인의 한 슈퍼마켓 점원이었던 청구인들이 고용주가 설치한 비밀 감시카메라를 통해 절도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된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은 스페인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패소하자 비밀 감시카메라를 통해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스페인 법원의 판결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고용주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과의 사이에 적절한 형량을 하였고,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주택임대부분 긴급조치에 관한 비상입법의 위헌성> 사건은 공공주택 부족 및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정한 비상입법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 제86조는 ‘특별하고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의회입법이 아닌 정부의 비상입법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의 기본적인 제도 질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자치주의 제도, 선거법 일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비상입법 중 일부 조항이 비상입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공공장소에서 알코올 음료의 소비를 금지하는 조항의 위헌성 여부> 사건은 공공장소 등에서 알코올 음료 및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물의 소비를 금지하는 법률이 국민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공질서를 유지할 입법목적은 인정되나 알코올 음료 등의 소비를 금지하는 시간, 방법,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보아 위 조항을 위헌으로 선고하였습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요르단 헌법재판소와 바레인 헌법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및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2020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언론 기사 속에 비친 세계헌법재판에 관한 소식을 모아 놓았습니다.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프랑스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디지털 노동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 프랑스 헌법재판소 2019년 12월 20일 결정을 중심으로->는 최근

우버(Uber) 등 디지털 노동 플랫폼 사업이 늘고 있음에 따라 이들 노동자를 전통적인 고용계약상 피용자로 볼 것인지, ‘1인 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와 디지털 노동 플랫폼 사업자 간 권리 의무를 명시하는 협약을 정하고, 그 협약을 준수하는 것을 사업자와 노동자 사이에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률을 제정하여 고용관계로 인정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정부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협약’이 실제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 관해 규율하는 것이고, ‘협약’으로 노동법 적용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입법자의 권한을 민간에 무단 이양한 것이므로 입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가 정리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에도 이에 관한 논의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정신이상 항변과 적법절차 조항 : 미국 연방 대법원 Kahler v. Kansas>는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지적 불능만 인정하고 도덕적 불능은 인정하지 않는 캔자스 주 형법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적법절차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